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7. 2.(월)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표철수 상임위원 (1인)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 위원님들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 (2018-32-375)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등 임원 선임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정한다’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방송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제2항에 의한 EBS 사장·감사·이사 임명을 위한 선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붙임>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임 계획(안)으로 첫 번째, 선임대상 임원은 <표>안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KBS·방문진 이사회 이사 선임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임의 기본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직능별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임원 선임에는 공고문에 붙어 있는 지원서의 항목들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둘째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의 인터넷 공개 및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임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모집 관련하여 종전과 바뀐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출서류에 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를 포함한다는 지원서를 내부용과 외부용으로 이원화하였고, KBS·방문진 이사는 3사 모두 중복 응모가 불가하게 선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후보자 정보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 사항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원서에는 경력사항, 지원동기, 임명 시 업무수행계획 및 지역방송에 대한 경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포함하였습니다. 이렇게 후보자에 대해서 제출된 국민의견은 취합하여 후보자 선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후보자 선정에는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성 및 성별, 언론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결격사유는 기존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협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의결을 통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항목인 EBS 사장 이사 선임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사장과 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기본원칙은 KBS·방문진과 동일하게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직능별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의 인터넷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임방안으로는 후보자 모집은 역시 KBS·방문진·EBS 이사는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원서에는 경력사항, 지원동기, 임명 시 임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보자에 대해 제출된 국민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 선정에 활용하며, 후보자 선정 시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도 고려합니다. 이후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의결을 통해 EBS 사장 임명 동의 및 EBS 이사 임명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방문진·EBS 감사 선임방안입니다. 관련 규정은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입니다. 방문진과 EBS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되며, 선임방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의결을 통해 임명하게 됩니다. 해당 분야의 특성과 행정 처리 능력을 고려하였으며, 마지막 추진일정은 박스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 있지요? 새로 도입되는 부분은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다음에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해 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도 자체는 얼마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선임할 때 관행으로 여야 정치권에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서 선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김영관 기획조정관

- 그 부분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방송법에는 또 각 해당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 일정한 비율로 추천하도록 한 제도 자체는 민심을 반영하고, 또 민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한다는 것은

‘우선 정치권의 나눠먹기다’, ‘기득권이다’라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제도의 취지로 도입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여야 간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될 경우에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고, 또 서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만 이사진이 구성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 쪽에 친화적인 인물로 전원이 구성된다, 그러면 그것이 관제언론이고 어용언론이 되는 것이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여야 간 추천비율을 정해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런 과거의 관행을 접고 새롭게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의 손으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보자고 우리가 새로 도입하려면 법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이고, 또 최소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치권이 지방선거 이후에 각 당이 체제 정비에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갖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숙의를 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협의를 거친 것을 보고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1차로 그렇게 해서 의결을 미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일정상 며칠이라도 늦춰서 여야 협상을 기다릴 수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실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예전의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이사 선임할 때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문진의 경우에 임기 만료일이 8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의결을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까?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실제로 나중에 구체적인 후보자를 놓고 상임위원들 간 논의를 하실 텐데 그 논의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문진의 이사 임기 만료가 8월 12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의결한 때로부터 최종 임명을 위한 추천에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오늘 어떻게든 협의를 잘해야 할 텐데 내용을 오늘 들어보니까 걱정이 몇 가지 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것이 응모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검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저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명단이 공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분의 성향이 나타나고, 지원서에 그런 것을 추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던 길, 그다음에 앞으로 임명이 되면 이사로서 어떤 각오로 직책을 수행할 것인지 이런 계획까지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추천하는 분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럽다, 왜냐하면 인사사항인데 그 사람의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달고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반대할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진 분에게 어떤 쪽에서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신상 털기를 하고 인신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비토(veto)하는, 끌어내리려는 이런 여론몰이가 인터넷에서 의견수렴 절차에 진행이 된다면, 그것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합리적인 분이 '나는 신상 털기에 나가고 싶지 않다' 분명히 여론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를 공격하는 네티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응모를 기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 가지 성향이 강한 강성인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어느 상대방에서 어떤 특정 후보를 공격해서 끌어내리려는 것이 비밀비재하게 벌어진다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절차가 과연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마련한 안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실명제로 의견을 올리게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수렴된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다 등등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어떤 극성스러운 집단에서 신상을 다 공개하면서 '이분은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저는 일단 먼저 이 자리에서 제도적으로 더 보완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치권의 협의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단 오늘 의결하지 않고 미뤄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임원 선정계획에는 종전과 바뀐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중복지원 금지를 EBS까지 확대한 것이 의미가 있고, 선임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시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지요?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시민이 뽑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시민검증단을 운영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 손으로 뽑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좀 전에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는다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서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상 털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적어도 공영방송 이사가 된다는 것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공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경력을 지녔고 지원동기가 어떤 것이고 임명이 되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밝히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국회가 추천해서 관행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뽑아왔다고 하는 것은 표현상 굉장한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됩니다. 국회가 추천해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추천 여야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국회 관계, 또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의견 개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지, 국회의 추천으로 '어떠 어떠한 사람을 하라'라는 식의 일방적인 내리쬄기의 과정들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과거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그런 관행조차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개선해 상임위원들이 더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회 의견 까지도 충분히 수렴해서 상임위원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뽑아서 KBS와 방문진 그리고 EBS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인물을 뽑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진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야 협상을 기다려서 여야의 협상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몫은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심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표철수 위원님께서 불참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표철수 위원님께서도 오늘 회의 개최, 안건상정 그리고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제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자', '처리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영방송 선임절차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김영관 기획조정관

- 방통위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바꿔 가면서까지 임원 선임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과 동일하게 상임위원들 논의를 거쳐 방통위원회가 추천하거나 방통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3년 전에 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기본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딱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공모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경력 사항, 지원동기 그리고 선임되었을 경우 직무수행계획, 본인이 정리한 지원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야당을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새로운 절차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KBS나 MBC 사장 선임절차도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는 시청자 대표, 국민 대표들이 선임하는 절차를 아예 뒀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해당 방송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법 개정 없이 임명권자 내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방통위의 이번 선임절차는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으로써 투명성 면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진행된다면 이사 선임 과정에 그동안 비밀주의, 폐쇄주의 이러한 것들을 끝내고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큰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고 선임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 것은 전체적인 트렌드입니다. 공영방송 사장들도 그렇게 선임해서 낙하산 논란이나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 등이 불식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관 후보들도 공개적으로 다 추천하고 또 공개해서 의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투명하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제도는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또 이 시대의 흐름이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바꿀 때 그에 맞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치권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의견을 나누는 또 조율하는 절차를 우리도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불씨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한 절차이고 합당한 바람직한 제도라면 굳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치권에도 협의를 거치도록 또 조율하도록 우리가 차라리 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일정 추진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니 그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진영논리로 또 진영대결로 가서 어느 쪽에서 추천된 어떤 성향의 인물을 집중공격하고, 또 신상정보가 어떤 경위를 거쳐 노출되고 그렇게 해서 신상 털기, 인신공격 이렇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바람직한 선임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한 가지 부작용이 건전한 비판 세력, 또 비판 성향을 갖는 또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인신공격에 시달리다 보면 여기에 제대로 선임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작년부터 봐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KBS, MBC 공영방송 이사진들의 특정 이사를 소위 끌어 내리기 위해 가서 시위를 하고 직장, 학교, 교회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위를 해서 결국 그 이사가 사표를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항상 불필요하게 공개가 될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마지막

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확히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공영방송 이사 중에서 부적격했던 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제대로 검증을 거쳐 선임이 되었다면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렇게 큰 분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정권이 주인이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비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문제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전에 선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만 그때 당시에 다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제대로 감시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 자체가 혼란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여론 재판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염려하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국민의 검증을 거쳐서 좋은 분들을 추천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공영방송 이사로서 저희가 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로서 선임되었을 경우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비추어 봤을 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선임한다면 왜 국민들로부터 검증받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김석진 위원님의 그런 우려와 별개로 시청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물론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을 주시더라도 개개인에 대해서 인신 공격성 의견이나 근거 없는 비난, 비판들은 지금 성숙한 국민의식에 비추어 보면 다 자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긴급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시민의견을 다는 양식에 지금 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부적절한, 과도한 표현이나 또 정확하지 않는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주장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또 반영하지 않겠다는 그런 단서조항 비슷한 것을 넣어서 '그런 의견은 우리가 접수하지 않겠다'는 이런 정도를 우리가 보강할 수 있다면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긴급제안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그런 정도의 장치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나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 정치적 관점에서 여냐, 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이러한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어떻게 제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추천도 받고 상임위원들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쪽 추천이다, 야쪽 추천이다가 아니라 지상파의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람,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을 선임하고 그분들이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저는 오히려 자격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회와 방통위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임원들을 뽑을 때 중시되어야 하는 점들이 보다 더 강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근거 없는 비방, 비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자제하도록 하고,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구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것으로 위임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짚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상 오늘쯤에는 공고가 나가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공고를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시민들이 공개된 후보들의 면면을 보고서 의견을 다는 것은 2주 뒤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 조경식 사무처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때 자세한 내용과 양식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담아내는 협의기간을 갖도록, 그래서 오늘 공고를 내는 것만 의결하시고 양식은 추후에 다시 해서 다음 회의 때 확정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고 양식까지 안전에 담겨져 있으니까 확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석진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난, 비방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것은 의견 수렴을 공고할 때 거기에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심사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는 국민 의견수렴 정리된 것이 위원님들께 개별로 심사 참고자료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안전대로 처리하고...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제가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의견을 수렴할 텐데 국민 의견 수렴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어서 컨폼을 받는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민들이 의견 수렴하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정해서 시민들에게 접속해서 접수를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양식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영관 기획조정관

- 그 양식을 저희가 정확하게...

○ 김석진 상임위원

-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방은 금지합니다'라고 양식이 있어야 시민들이 보고서 자제할 것 아닙니까?

○ 김영관 기획조정관

- 김석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요. 지원서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만큼 인신공격 등의 내용이나 지나친 표현은 삼가도록 지원서 작성요령에 몇 개를 더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 맨 앞부분에 한다거나 뒷부분에

한다거나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명제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상식한 표현을 하거나 인신공격 등을 함부로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인신공격적인 내용이나 지나친 표현 등은 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작성요령을 몇 개 병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위원장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지원서는 지원자가 쓰는 양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작성요령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청자들이 작성하는 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 이효성 위원장

- 작성을 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몇 가지 주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예.

○ 이효성 위원장

- 이 지원서 작성내용은 다른 내용입니까?

○ 김영관 기획조정관

- 지원자가 지원하는 양식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나중에 국민 의견수렴 할 때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몇 개 고른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 신종철 행정법무담당관

- 저희가 홈페이지를 실제로 구축할 때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심사 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실제 구축할 때 문안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은 그런 정도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운용의 묘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임계획에 관련된 사안이고, 다 공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절차를 어떻게 밟고 그때 유의사항이 무엇이라는 것은 사무처에서 관련된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김석진 위원님의 우려를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김석진 위원님이 대표하는 당의 여러 가지 염려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좀 더 민주적으로 또 방송의 궁극적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과 시청자의 의견을 방송 임원진을 선정하는데 참고하고 반영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불법적인 법 이외에 절차를 만들어서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방송통신위원들이 임원들을 선정해서 KBS는 대통령께 제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방문진·EBS는 저희가 직접 선정·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개 지원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경우에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의견도 공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 의견만 나오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조금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태극기집회의 그 맹렬성으로 볼 때 아마 진보 쪽 인사도 상당히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대의 부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청에 우리가 응하는 것이 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규를 어긴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저희 위원회는 여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정신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책결정에서 충분히 구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때로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를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분명히 남기시고, 때로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는데 그 정신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진 위원님이나 표철수 위원님과 같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인사에도 그런 식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들을 저희가 임명 시 고려했던 것도 결국 절차적으로는 그분들 추천에 응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추천하는 비율로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신을 저희가 구현하되,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사람들, 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방송 임원진으로 오셔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제때 의결을 못 하도록 막는 상황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건전하고 좋은 분들을 여야 쪽에서 다 아우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진 위원님께서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점들은 시청자 시민들의 의견 수렴할 때 극단적인 인신공격이나 지나친 표현들에 의해서 지원자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진 위원님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대로 의결해서 공고하고, 원래 절차대로 진행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7분 폐회 】